

일본의 '배상문제' 이렇게 본다

1991. 8. 15.

113

일본은 제2차세계대전과 그동안의 식민지 지배 등 역사의 '빚'을 청산했는가. 나아가 이러한 청산작업을 토대로 평화국가의 헌법 이념에 맞는 올바른 길을 걸어왔는가.

2차대전 종전 46주년을 맞아 이런 물음이 일제 침략 피해국가들로부터 이전보다 강력하게 제기되는 것은 그 대답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들 나라에서 피해자나 그 유가족 그리고 여러 민간단체가 열성적으로 '배상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실은 이를 극적으로 웅변한다. 이 운동은 이미 단순한 금전적 배상이나 보상차원을 넘어 올바른 역사의 자리매김, 나아가 피해국가들의 바람직한 미래상이라는 장기전략과도 직결되는 무게로 다가서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일고 있는 '배상운동'의 현주소와 역사적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등을 각계 전문가들의 특별기고 시리즈를 통해 정리해본다.

〈편집자〉

'배상'운동의 역사적 의미 김 영 호

마전 히로시마에서 열린 평포지엄에 참석했다. '노 모어 시마'(히로시마와 같은 원폭가 지구 위에 다시 없기를 축는 운동)에 대해 평소 느낀을 솔직히 얘기하고 싶었다. 일본인들이 히로시마의 피폭모여 눈물을 흘릴 때 한국의 저명학자가 <뉴스위크>에 온 일본에 원폭을 열개쯤 투어야 했다는 글을 썼다. 나는

그 말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동시에 일본의 히로시마의 논리에도 늘 심한 안타까움을 느껴왔다.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당시 '천황' 군부·국민이 완전히 일체화된 병영국가였고 따라서 전쟁책임이 없는 민간인은 거의 없었다. 진정한 희생자는 조선인 피폭자이다. 그들이야말로 식민적 희생과 원폭의 희생을 이중으로 당한 역사의 '맨 밑바닥'이다. 저들을 계속

식민주의적 의식에서 끌고앉아 그 위에서 피해자 의식을 내세우며 당시의 전범 내지 준범적 피폭자들을 평화의 이름으로 추존하는 어떻게 보편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나는 오히려 '노 모어 히로시마 드라마'(히로시마의 연극을

신보수주의와 한국의 독재정권이 서로 얽힌 국제체제 속에서 묻히고 간혀 있던 이 문제가 이제 냉전체제와 독재체제가 무너지면서, 일반 민중의 차원에서 세차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 피폭자 6만명이 배상을 받지 못한 데는 두가지의 형식적 배경이 있다. 이것은 물론 징용자 배상, 여자정신대 배상, 사할린동포문제와 그밖의 수많은 피해보상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다. 우선 원폭을 투하한 것은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 논리는 일본이 강제적으로 한국인을 끌고 가고도 나중에는 일본인 피폭자에게 하고 있는 모든 지원에서도 이들을 기본적으로 제외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한국인 피폭자문제는 전쟁보상차원에서 식민지보상의 차원으로 환원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전쟁의

책임의 차원에서는 한국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회·배상을 도출해내기가 어렵게 된다.

한-일간에는 식민지적 모순이 선행했고 따라서 식민지보상차원에 서는 것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길이 된다. 이것은 1910년의 무력적 강압을 전제로 한 '한일합방조약'의 무효화투쟁과 직결된다.

또 하나의 배경은 한-일간의 보상문제가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 및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서 "양국도 양국 및 그 국민(법인포함)의 재산 권리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협정으로 처리가 끝났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조약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차원의 것이지 민간차원의 보상문제는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군대국가에서



이달초 '아시아-태평양지역 전폭도교에서 집회를 갖고 일본의 사

냉전체제 무너지며 민간차원 요구 봇물 남·북한 공동대응책 강구돼야

집어치워라!)라고 말하고 싶다. 히로시마의 세계사적 의미를 회복시키는 길은 오직 하나 맨 밑바닥을 맨 앞자리에 세우는 것이다. 조선인 피폭자들이야말로 세계평화의 원점이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의 식민지 전쟁 배상을 요구하는 소리가 국제적으로 높아져가고 있다. 한국으로부터 원폭 피해자들이, 일제 징용자들이, 여자정신대가, 사할린잔류동포가 한꺼번에 사회·배상문제를 들고나오는가 하면 중국에선 무려 1천8백억달러의 대일민간배상을 청구하고 나왔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홍콩 그리고 남태평양의 팔라우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속출하고 있다. 앞으로 이

차원에서는 미-일전쟁 당사자 사이에서 한국은 일본쪽에 편입되어 있었고, 기묘하게도 대전 뒤 징용한국인이, 미군에 의하여 전범으로 처리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다. 일본의 연합국에 대한 전

민간의 청구권 문제나 배상문제는 개개인의 고유한 권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조약은 인간의 배상요구에 대해 정부가 외교적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해석돼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배상과 민간배상을 구별하는 논리 위에서 이번엔 중국에서 1천8백억달러에 해당하는 민간배상을 청구하고 나선 것이며, 한국은 같은 논리에서 다양한 민간배상을 요구하고 있